광주·전남 대통합…6월 3일 특별시장·통합교육감 뽑나

시·도지사-시·도교육감 국회서 공동합의문 발표
'특별시교육청' 출범…특별법 2월 국회 통과 공조
시·군·구 정체성 유지…공무원 종전지 근무 보장

14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시도지사-교육감 4자 회담'에 참석한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왼쪽부터) 이 공동합의문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전남도·시교육청·도교육청이 광주·전남 행정과 교육행정 대통합에 함께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6·3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 뿐만 아니라 교육감도 통합 선출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이정선 시교육감, 김대중 도교육감은 14일 오후 국회에서 '4자 협의체 간담회'를 갖고, 통합 특별시와 특별시교육청 출범을 목표로 '광주·전남 대통합을 위한 공동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공동 합의문에서 4개 행정기관은 광주·전남 통합 광역지방정부와 광역지방교육청 출범이 역사적 사명임을 공감하며,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최적의 통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4자 협의체'는 '(가칭)광주전남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2월 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상호 긴밀히 협력하고, 시·도의회와 함께 공감대 확산을 위해 설명회, 토론회, 간담회 등 공청회를 시·군·구별로 개최한다.

특별법이 발의·심의 절차를 거쳐 현재 추진 계획대로 2월 안에 입법이 완료되면, 통합단체장과 통합교육감 선출이 현실화할 것으로 보인다.

또 행정·교육행정 통합 이후에도 광주 5개 자치구와 전남 22개 시·군이 스스로의 정체성을 지켜 나가도록 공동 협력하고, 행정·교육행정 통합 과정에서 교육자치를 보장하기로 명시했다.

합의문에는 통합 특별시와 통합 특별시교육청 설치 이전에 임용된 공무원은 종전의 광주시와 전남도 관할구역에서 근무하는 내용도 담겼다.

4자 협의체는 행정·교육행정 통합 이후 행정체계, 재정구조, 조직 개편, 권역별 균형발전 전략, 교육자치 등 (가칭)광주전남특별시의 미래 전략을 공동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전남 양 교육청이 한목소리로 뜻을 모은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번 합의 배경에는 교육자치를 확고히 보장하라는 교육계와 시도민의 염원이 담겨 있다"며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교육자치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고히 보장해 행정·교육행정 통합을 반드시 성공으로 이끌겠다"고 밝혔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시·도민들께서 대통합의 염원을 담아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계의 참여는 통합에 큰 의미를 더해준다"며 "행정통합 과정에서 27개 시·군·구는 물론, 어떤 직업군도 소외되거나 손해 보지 않도록 세심하게 챙겨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정선 시교육감은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도 교육자치의 가치를 굳건히 수호하고, 인사 등에서 교육 구성원의 불이익이 없도록 현장의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삼겠다"며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호남의 미래를 이끌 인재 양성에 흔들림 없이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대중 도교육감은 "광주·전남은 원래 한 뿌리로, 이번 통합은 지역 경쟁력과 교육의 질을 함께 높이는 전환의 계기가 될 것이다"며 "이를 위해 교육자치의 확고한 보장과 교직원 인사의 안정성이 전제돼야 하며, 특히 지역소멸과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농어촌·소규모학교 특례를 포함한 실질적인 지원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신안군, 규제혁신 최우수기관 선정…적극 행정 돋보여

해상풍력 송전선로 사업 걸림돌 해소 3000억 비용 절감
행안부 평가, 전남도·함평군·광주 북구청 우수기관 포함

신안군이 행정안전부 지방 규제개혁 혁신 추진성과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2025년도 지방 규제혁신 추진 성과 평가'에서 전남 신안군을 비롯해 대전시, 경기 안양시, 대구 중구 등 4곳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우수기관에는 광역단체에서 전남도가 선정돼 2억원의 특별교부세를 받게 됐으며, 기초단체에서는 전남 함평군과 광주 북구청이 우수사례로 포함돼 각각 1억원의 교부금을 확보하게 됐다.

이번 경진대회는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이 추진한 규제혁신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행안부는 전국에서 제출된 106건의 사례를 시도 간 교차심사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17건의 우수 규제혁신 사례로 선정했다. 이 중 상위 10건은 이날 현장 발표 심사를 통해 최종 순위가 결정됐다.

최우수 기관에 선정된 신안군에는 3억원의 특별교부세가 교부된다.

신안군은 습지보호지역 가공전선로 설치를 허용하는 규제 개선을 통해 대규모 해상풍력 송전선로 사업의 걸림돌을 해소해 약 3000억원의 비용을 절감했다. 공사기간도 70개월에서 32개월로 단축하는 효과를 거뒀다.

이를 통해 관련 부서 협업을 통해 취약계층 수도요금 감면제도를 기존 신청주의 방식에서 대상자에게 일괄 적용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전남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2022년부터 4년 연속 규제혁신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누적 특별교부세 15억 원을 교부받았다.

도는 전문가 참여를 통한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확대, 도 중점 규제개선 과제 발굴·추진, 행안부 등 중앙부처와의 규제개혁 토론회와 현장 간담회 8회 개최 등 규제 발굴과 개선을 지속했다.

이 같은 노력을 통해 해상풍력 외부망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산정 기준 개선, 외국인 계절근로자 어업분야 적용 업종 확대(해상 굴 양식), 건설공사 낙찰하한율 조정, 미등기 사정토지 일제정비 특별법 제정, 섬 지역 최종 매립 폐기물의 육지 반출 완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등 지역 투자 촉진과 정주 여건 개선의 기반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함평군은 '농어촌 지역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농공단지 건폐율 규제 완화 사례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함평군은 농공단지 건폐율이 국가산단·일반산단보다 낮게 책정돼 기업 확장과 신규 투자가 제한되던 문제를 정확히 짚어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안을 제시했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규제 개선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과 주민의 삶의 질 개선에 노력해 준 지방정부의 노고에 감사를 표한다"면서 "행안부는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업해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체감도 높은 규제혁신 성과를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12·29 참사 항공기 엔진, 사고전 5차례 리콜

정준호 "객관적 엔진 정밀 재조사 시급"

12·29 여객기참사 항공기에 장착된 엔진 기종이 사고 이전 4년간 안전개선조치를 총 5회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여객기참사 국조특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2·29 참사 737-800 항공기에 장착된 엔진 기종이 지난 2020년 11월부터 2024년 3월까지 강제 안전개선조치를 받은 횟수가 5회에 달했다.

항공기 '안전개선조치'는 리콜(제작결함시정)과 유사한 개념으로 감항성개선지시서(AD·Airworthiness Directive)라고 하며, 이는 항공기, 엔진, 부품에 존재하는 불안전한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항공제품의 검사, 부품의 교환, 수리·개조 등을 제작국가 항공 당국에서 강제로 지시하는 문서를 말한다.

사고 항공기에 장착된 'ATA 72' 엔진계통에 대한 강제적 제작결함시정을 참사 이전인 2024년 3월까지 총 5회 실시했고, 검사 또는 교환, 수리 등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이 중 긴급한 조치(E)가 필요한 경우도 1건이었다.

개선 조치한 부분은 동력 전달 장치, 압축기 구동 엔진 내부 부분 등이었다.

정준호 의원은 "사고 항공기 엔진의 과거 안전개선조치가 확인된 만큼, 객관적인 사고 조사를 위한 더 면밀한 엔진 조사가 필요하다"며 "항철위는 자체적인 조사와 국내외 전문가 자문 등 추가 조사를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문체부, 8기 지역신문발전위원 9명 위촉

문화체육관광부는 제8기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 9명을 위촉했다고 14일 밝혔다.

8기 위원은 김진이 전 고양신문 편집국장, 김창우 전 강원일보 미래전략기획실장, 안상호 전 매일신문 이사, 오세욱 선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부교수, 우희창 시민미디어마당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임한순 경일대 특임교수, 정후식 전 광주일보 논설주간, 조상진 전 전북일보 논설위원,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다.

신임 위원들은 비상임이며 임기는 2028년 12월까지 3년이다.

위원회는 이날 첫 회의를 열어 조상진 위원장과 최창렬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향후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지역신문 발전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 제시, 지역신문발전기금 조성과 운용에 관한 사항,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사 선정 등 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행정통합 당론 채택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조속한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광주시당은 14일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적극 추진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조속한 추진을 시당 당론으로 결정했다.

광주시당은 결의문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나 형식적 협력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통해 광주·전남이 국가 발전 전략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지역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고 실행하는 주체로 도약해야 한다는 점도 공식 입장으로 제시했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순천대·목포대 통합 여부 내일 결정

순천대, 학생 대상 찬반 재투표
찬성률 50% 미달시 통합 무산

순천대학교가 목포대학교와의 대학 통합에 반대 의견이 우세했던 학생들을 대상으로 오는 16일 찬반 투표를 다시 실시한다.

순천대는 학생 설문조사 결과와 전체 교수 긴급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종합 검토한 끝에 재투표를 진행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투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자투표 시스템(K-voting)을 활용해 실시된다.

앞서 학생 자치기구 주도로 지난 12일 진행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 630명 가운데 348명(55.2%)이 재투표에 찬성했다. 다만 전체 학생 6328명 가운데 약 10%만 참여해 학생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대학 측은 이러한 문제 제기를 고려해 이튿날 교수 회의를 열고 재투표 여부와 일정을 확정했다.

이번 재투표에서 찬성이 과반을 넘길 경우, 국립 의과대학 설립을 목표로 추진돼 온 양 대학 통합은 다시 한 번 고비를 넘게 된다. 반면 과반에 미치지 못하면 통합 추진의 동력과 명분이 크게 약화돼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다.

지난달 23일 실시된 순천대·목포대 통합 찬반 투표에서는 순천대 학생들의 반대 비율이 60.7%로 나타났다. 당시 순천대 학생 투표율은 57.8%였다. 반면 목포대에서는 교수·직원·학생 등 세 주체 모두 찬성이 50%를 넘겼고, 순천대 역시 교수와 직원은 찬성이 과반이었다. 그러나 순천대는 세 직역 모두에서 찬성률 50% 이상을 기록해야 통합에 찬성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내부 기준을 정해, 최종적으로 구성원 의견을 '반대'로 판단했다.

송하철 목포대 총장은 "전남을 대표하는 거점 국립대로 도약하고, 지역의 숙원인 국립의대 신설을 갈등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양 대학 통합이 필요하다"며 "순천대 구성원들의 대학 발전을 위한 의지와 결단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순천=박칠석 기자 2556pk@gwangnam.co.kr

전진숙 "조류충돌 예방활동 범위 5㎞로 설정"

무안공항 반경 13㎞ 내 위험관리계획 배치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당시 무안국제공항이 조류충돌 예방활동의 범위를 법정 13㎞가 아닌 5㎞로 설정, 규정을 위반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14일 국회 12·29 여객기참사 국정조사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전진숙(광주 북구을) 의원이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24·2025년 무안공항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 자료에 따르면 무안국제공항은 참사 당시 위험관리계획 범위를 공항 반경 '5㎞' 이내로 설정했다.

이는 상위법령과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에 따라 제정된 국토교통부 고시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 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에 어긋난다 게 전 의원 분석이다. 고시에는 공항 주변을 '공항 표점 기준 13㎞ 이내'로 규정하고, 조류 등 야생동물의 충돌 위험을 어떻게 관리할 지 계획 수립을 의무로 하고 있다.

그러나 무안국제공항의 위험관리계획에는 조류충돌 예방활동의 범위를 '무안국제공항 반경 5㎞' 이내로 설정, 조종사들에게 정보를 제공한 정황이 발견됐다.

전 의원은 "조종사들이 위험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판단이 이뤄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는 기준을 제대로 적용해 조류충돌에 대해 관리하고 있었는지 해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산하 기자 goback@